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경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691
----------	------

발의년월일 : 2023. 7. 7.

발의의원 : 조경구, 김정옥,
박소영, 박종필,
육정미, 윤영애,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황순자
의원
(10명)

1. 제안(제정) 이유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체계적인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관할구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현황조사 및 근로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

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4.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